

TF까지 만들었지만...속수무책 보이스피싱

“저금리 대출 받으려면 대출금 상환하라” 은행직원 사칭 등 광주 서민 피해 속출...하루새 5건·피해금액만 6900만원 경찰은 숨기기 급급...검거 실적도 전년보다 14%나 줄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기 침체에 모자란 재산을 잃는 서민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 테스크포스'를 만들고 전단지, 홍보포스터, 홍보영상 송출 등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있다"는데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유사 사례의 신속한 전파·홍보를 통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범죄 발생 사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루동안 광주에서만 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 5명의 피해자가 6900여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빼앗겼다.

북구에 사는 40대는 19일 오전 11시20

분께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 1350만원을 건넸고 다음날 오전 11시께 "나머지 50%를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찾아온 범인에게 현금 1350만원을 범인에게 건넸다.

서구에서는 50대가 19일 오후 1시께 동일한 수법으로 2450만원을 뜯겼고 광산구 20대 여성도 오후 3시께 600만원을 넘겼다. 북구에 사는 30대는 19일 오후 6시 55분께 같은 수법으로 현금 980만원을 건넸다.

남구에서는 30대 남성이 19일 오후 3시 20분께, 20일 오후 2시20분께 각각 6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봤다.

이들은 모두 다음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254건으로 전년(135건)에 견줘 88%나 늘어났다. 피해액도 지난해 37억2000만원 보다 23%가 증가한 45억 8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검거 실적은 전년만 못하다. 올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검거 건수는 254건으로 전년(296건)보다 14% 낮아졌고 검거 인원은 32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98명)에 비해 35%나 적은 수준이다.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피해도 커지는데 범인 검거는 예전만 못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달부터 '특별대응팀'을 꾸리고 수차례 대응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근절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경찰은 홍보 영상 및 전단지(5만장), 포스터(1500장) 등을 제작해 463개 아

파트단지, 원룸(220개), 상가(363개) 등을 나눠주는가 하면, 소상공인연합회(11만5000명), 버스정보시스템(64개), 아파트(3만7000여세대) 엘리베이터 내부 모니터 등에 홍보영상을 내보내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콘텐츠도 전파하고 경찰 전 직원을 메신저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하루에만 5건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들이 지나도록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한 전파·주의를 당부하는 문자·홍보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발생 사실을 숨기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흥군이 구입한 유물 모두 가짜”

법원 “매도자에 속아 10억 계약...매매대금 줄 필요 없다”

고흥군이 유물 매도자에게 속아 10억원 을 주고 체결한 매매계약이 취소됐으니 잔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민법(제 110조 1항)에 따라 계약 취소가 이뤄졌으니, 고흥군이 유물 매도자가 청구한 매매 대금을 치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유물 매도자 A씨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소송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흥군이 매매대금(10억원)의 일부(1억30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고흥군이 A씨 부부에게 속아 체결한 매매계약의 점을 들어 계약을 취소한 만큼 매매대금을 달라는 A씨 요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11월 ▲윤봉길 의사의 유물 ▲안중근 의사의 족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시문 ▲김구 선생의 서신 ▲독립운동가 조완구 선생의 서신 ▲독립운동가 조경환 선생의 서첩 등 유물 6점을 고흥군에 10억원에 넘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유물을 넘겼다.

고흥군은 같은 달, 매매대금 중 4억원을 지급했지만 잔위 논란이 제기되면서 나머지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나머지 잔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은 "각 유물이 진품이 아니라면 채무 불이행은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윤봉길 의사 유물이 진품이 아닌 점을 들어 일부 계약 해제 사유를 반영하고 매매대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흥군이 A씨 등에게 각 유물 출처와 진위 여부 등에 관해 기망

(欺罔·속임) 당해 계약이 체결됐다"며 "고흥군이 계약취소를 통보한 것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계약이 취소된 만큼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요구하고 있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흥군은 2015년 개관을 앞둔 담양문화관의 품격 향상을 위해 국가 보물 지정 가치가 충분한 애국지사 유물을 보존·전시할 목적으로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점을 감안, A씨 등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모조품이었을 뿐 아니라 김구 서신, 조완구 서신, 조경환 서첩은 1000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서예 작품들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진품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무렵, A씨 부부 등이 갖고 있던 윤봉길 유물, 안중근 족자, 안창호 시문, 김구 서신, 조경환 서첩은 모두 모조품이었을 뿐 아니라 김구 서신, 조완구 서신, 조경환 서첩은 1000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서예 작품들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진품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럼에도 A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 마지 진품이 확인된 것처럼 고흥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주역사박물관 전시가 끝나면 광주 남구청에 기탁해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받게 하려고 논의중"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민법(제 110조 1항)을 감안, 해당 매매계약의 경우 고흥군이 취소의사표시가 기재된 재판 준비서면이 A씨 등에게 송달된 시기에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흥군이 속아서 체결된 해당 유물매매계약은 취소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A씨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9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한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선고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A씨가 중증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암벽 추락사고 대비 구조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19산악구조대와 항공구조구급대 등과 함께 21일 오전 무등산 중봉에서 암벽 추락사고를 대비한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안전본부 제공)

어설픈 준비에...5·18 사적지 개방 중단

시민들 헛걸음 등 불편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기로 했던 5·18 사적지들이 일정을 앞당겨 조기 에 문을 걸어잠갔다.

'생생대기식' 개방이라는 지적과 관리 부실로 인한 비판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지만 꼼꼼한 준비 없이 이뤄진 어설픈

정책 결정으로 시민들만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는 5·18기념재단에 공문을 보내 지난 15일부터 진행중인 5·18 사적지인 옛 505보안부대, 국군통합병원 등에 대한 개방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5·18기념재단은 법무부(옛 광주교도소), 광주시(505보안부대, 국군통합병원), 서남재단청산(적십자병원) 등에 협

조를 요청, 해당 시설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념재단측은 미공개 사적지의 이해를 돕고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적지 주변 해설 안내까지 검토했었다.

하지만 광주교도소의 경우 별다른 설명도 없이 법무부 임의대로 개방시간을 조정하는가 하면, 일부만 개방해 시민들의 불만을 샀고 505보안부대나 국군통합병원은 사전 시설에 대한 정비나 점검 없이 이뤄져 사고 우려 등이 제기됐었다.

광주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기념재단 측에 중단을 요구하면서 기존 비공개 사적지 개방 행사를 멈췄지만 이마저도 기념재단 홈페이지로만 공지하면서 해당 시설을 찾았던 시민들이 헛걸음을 하는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방을 앞둔 사전가 미흡해 죄송하다"면서 "5월 단체, 기념재단 측과 협조해 이들 사적지를 현장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세월호 특수단 설치 촉구 진도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

세월호와 관련한 기존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 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도보 행진이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21일 진도 팽목항에서 출정식을 열고 목포, 광주, 전주, 대전, 천안 수원을 거쳐 청와대까지 20일 동안 570km를 걷는다.

시민모임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얼마 남지 않아 지금 상태로는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초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해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기관들이 관여한 것이 확실한데 검찰은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는 검찰 역시 2014년 세월호 진상을 은폐한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며 "해경 경비정 정장 1명만 처벌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에만 수사를 맡기면 해경에 대한 조사로만 끝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는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검사, 감사원, 검찰, 경찰, 군 검사 등으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실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